

내부감축투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요약

(’19.6.25 기후경제과)

I. 설문조사 개요

- 할당대상업체 및 전문가 629명 중 276명이 답변하여 총 44% 응답

구분	할당대상업체	전문가
설문 기간	2019.4.22~2019.05.20	2019.05.27~2019.06.18
설문 대상	607개	22명
응답 비율	43.8%(266개)	45.5%(10명)

II. 설문조사 결과

①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내부투자 여건

①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유형 우선순위

- 할당대상업체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해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는 투자유형은 “배출권 매매”가 가장 우세했으며,
- 전문가들은 “배출권 매매” 보다 “내부감축투자”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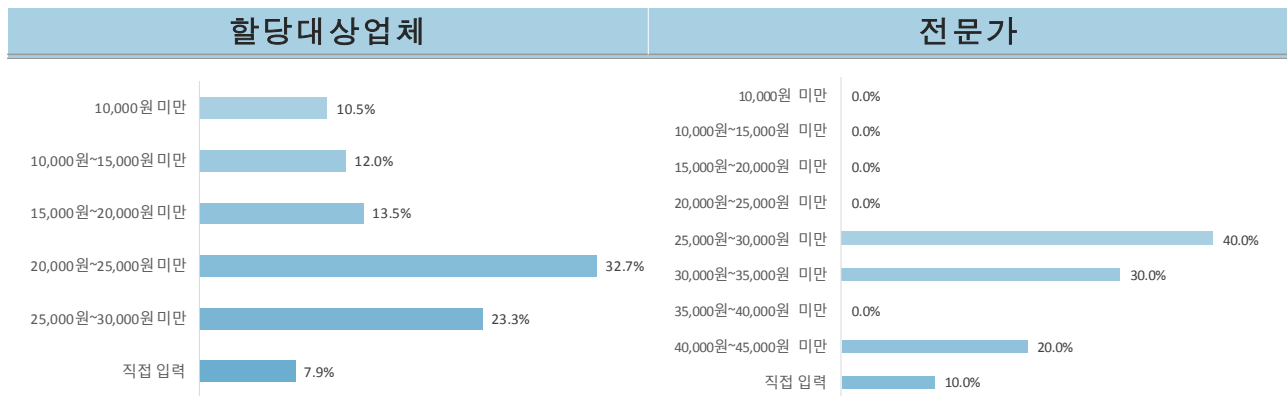
할당대상업체			전문가	
	실시	계획		
1	배출권 매매	배출권 매매	1	내부감축투자 (노후설비교체, 유지보수 등 제외)
2	내부감축투자 (노후설비교체, 유지보수 등 제외)	내부감축투자 (노후설비교체, 유지보수 등 제외)	2	배출권 매매
3	정부 예비분 구입	정부 예비분 구입	3	외부감축투자(국내)
4	외부감축투자	유상할당 경매 참여	4	외부감축투자(해외)
5	-	외부감축투자		

②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내부투자유형 우선순위

- 할당대상업체 및 전문가 모두 동일하게 “에너지 효율향상사업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

할당대상업체		전문가	
1	에너지 효율향상사업(LED 조명교체, 전력절감설비 설치, 설비성능 개선 등)	1	에너지 효율향상사업(설비성능 개선, 전력절감설비 설치 등)
2	폐열회수	2	연료전환
3	신재생에너지	3	폐열회수
4	연료전환	4	공정가스 감축(SF6, N2O 등)
5	공정가스 감축(SF6, N2O 감축사업, CCS 등 CO2 포집사업 등)	5	신재생에너지

- ③ 온실가스 감축을 수반하는 내부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배출권 적정 가격
- 할당대상업체의 약 92%는 30,000원 미만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, 전문가는 60%가 30,000원 이상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응답
 - 할당대상업체에서는 “20,000원~25,000원 미만”의 응답률이 가장 우세했고, 전문가는 “25,000원~30,000원 미만”의 응답률이 가장 우세



② 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

① 배출권 가격 상승 및 거래 비활성화의 원인 우선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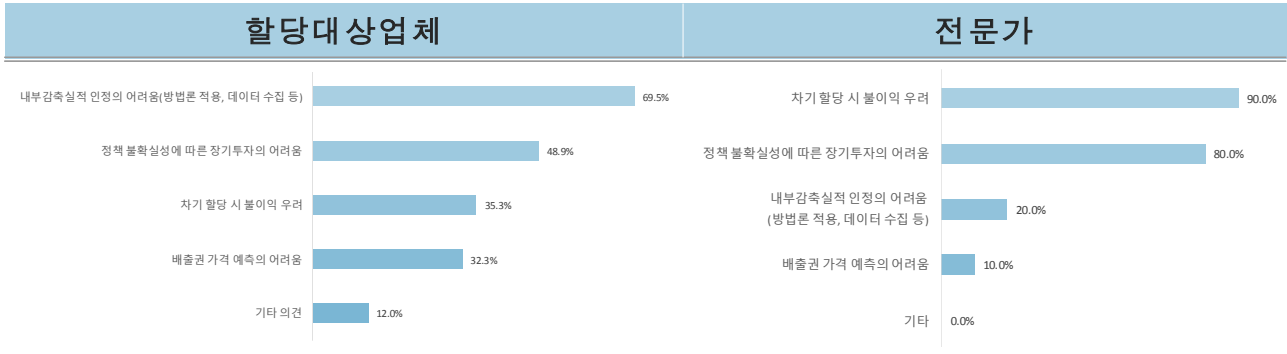
- 할당대상업체에서는 가격상승 등의 원인을 “감축부담의 지속적 확대”라고 응답했으며, 전문가들은 “정책의 일관성 결여”라고 응답

할당대상업체		전문가	
1	감축부담의 지속적 확대	1	정책의 일관성 결여 (주무관청 변경, 법/지침 변경 등)
2	정책의 일관성 결여 (주무관청 변경, 법/지침 변경 등)	2	감축부담의 지속적 확대 등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여유분 보유
3	정부의 시장개입	3	정부의 잦은 시장개입
4	기업의 감축노력 부족	4	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분 공급 부족

③ 내부감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

① 온실가스 감축을 수반하는 내부투자를 저해하는 요인

- 온실가스 내부감축 저해요인에 대해 **할당대상업체**는 “**내부감축실적 인정의 어려움**”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반면,
- **전문가**들은 “**차기 할당 시 불이익 우려**” 응답률이 가장 높음



②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

- **할당대상업체**는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“**내부감축실적 인정 기준 완화**”를 꼽은 반면,
- **전문가**들은 “**감축 인센티브 제공(세제혜택 등)**”이라고 응답

